

大學社會의 理念的 葛藤, 어떻게 克服할 것인가

金 日 秀

(高麗大 法學科)

1. 들어가는 글

지금 우리의 大學社會는 격심한 陣痛을 겪고 있다. 학문과 진리 탐구의 상아탑으로 상징되는 대학 사회가 어느새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이념의 葛藤과 論爭의 場으로 화해 버린 듯한 느낌이다.

물론 이같은 이념적 갈등과 대립은 대학 사회만이 안고 있는 고유 문제가 아니라 격동기에 처한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의 솔직한 반영 이외에 다름아니다. 대학이라고 해서 사회로부터 고립된 성역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사회가 명랑하면 대학도 명랑하고 사회가 혼란하면 대학도 그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사회가 민주화와 자유화의 역사적 과제에서 뒷걸음질 할 때 대학도 진리와 가치 추구의 본래 임무에 안주할 수 없다.

사회인의 행동 양식이 변하면 대학인의 행동 양식도 변한다. 비록 대학인이 가치관에 있어서만은 순수하고, 이상에 있어서만은 높고, 양심에 있어서만은 기성 세대의 지식인이나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순도를 지녔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 양식에는 비뚤어진 우리 사회의 病理가 솔직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리라.

사회와 역사의 의식이 변하면 대학인의 의식도 변한다. 그래서 진실을 은폐하고 가리워져 있던 虛偽意識의 해체 작업을 대학의 지성은 하나의 사명으로 자임하기도 한다. 최근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 반제만독결론쟁, 변혁운동론, 노동운동, 통일운동 등은 民主化의 길목에서 대학 스스로 自由와 自律 속에서 眞理에 접근하려는 몸부림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사회 의식의 풍토 속에서 우리의 역사와 언어와 문화의 主體性과 正體性이 굴절되고 훼손당해 왔다는 사실에 직면할 때, 민족과 역사에 대한 진실을 알고 말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의 몸부림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와 역사 속에서 진통하는 이 현실적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자면 우리는 학문과 진리 탐구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의미에 따라 먼저 이같은 갈등의 현상을 위기에 처한 대학의 현실로서 직시하고 그 요인을 더듬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사실로서의 갈등을 풀기 위해 우리 대학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또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大學社會의 理念的 葛藤 狀況

대학 사회의 이념적 갈등 상황은 대학 사회의 고유한 원인에 직접 기인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반 사회의 갈등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역사가 일정한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학 자체의 고유한 문제로 인한 이념적 갈등을 오래 체험해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의 요구를 위시하여 대학 총장의 선출 및 인사, 대학 재정과 학생 복지에 관한 많은 문제에 학내 여러 구성원들의 참여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를 둘러싼 학내 분규, 이를테면 재단 총장과 직선 총장의 현존과 같은 문제도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야기된 문제 상황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학 사회는 대학 본연의 본질과 사명을 둘러싼 갖가지 정치적·관료적 간섭과 개입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됨으로써 야기된 갈등도 심각하다. 인사와 학생 정원, 제정 등 모든 문제에 관하여 주무 관서인 문교부의 감독과 지시가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대학의 행정은 자연히 公權力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의존이 長期化됨으로써 대학 사회에 어용화 논쟁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불어닥치게 되었다는 점도 사실이다.

결국 官 위주의 대학 행정은 대학의 창조적 발전을 저해하고 자유와 지성이 숨쉬어야 할 대학 사회에 권위와 탈법, 비리가 숨쉴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는 결과가 되었다. 대학 사회 스스로가 자체의 道德의 基準과 知性的 水準을 바탕으로 對사회적인 행동 규범의 모범이 되지 못할 때, 대학은 자율과 자기 목소리를 발할 수 없다. 부패와 비리가 풍기는 대학 운영은 官이 지배하는 체제하에서는 자연히 대학 스스로 機會主義와 商業主義에 탐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自淨力を 잃은 대학 사회는 관의 감독의 눈초리 앞에 움츠러야 되고, 이것은 대학이 사회와 민족과 역사 앞에 가져야 할 본연의 자세와 임무를 회피한 채 안일하게 관 주도의 정책에 복종하는

길밖에 없게 만든다. 국책 과목의 교과과정 신설이나 학과 증설, 인원 증원 등이 합리적인 기준이나 토론을 거친 논증 과정을 통해 설득력 있는 정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관의 정책이기 때문에 대학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단순 논리이다. 그동안 관의 정책을 주도해 온 역대의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大學의 敎育政策이 얼마나 심각하게 뒤흔들렸는가를 고려한다면 이같은 사실은 새삼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런데 대학 사회의 이념적 갈등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不義한 政治·經濟的 現實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독재 권력과 군사 정치 문화는 開放된 民主社會의 이념적 가치들을 전도시킨 채 비틀린 가치 질서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해 왔다. 국민이 사실을 바르게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政治的自由를 실정법으로 없애면 뒤 거것을 진실처럼, 진실을 거짓처럼 믿고 살도록 백성을 강요해 온 것이 역대 독재 정권들이 벌여 온 통치 기술이었다. 장기화된 독재 권력은 似而非 지식인과 경제인과 언론인을 양산하여 親衛勢力을 구축해 가고자 하지만, 내부적인 정통성과 정당성과도 덕성을 결여한 정권의 취약성은 정치의 내부적 불안을 낳게 되었다. 이같은 內部的 不安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 公權力的 暴力의 사용이었다. 입법과 사법까지도 정권 안보의 차원에서 그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독재 정치의 속성이며, 독재 정치에서 폭력과 공포는 교육정책에서 나온 부득이한 수단이 아니라 政治工學的으로 계산된 高度의 統治技術로 애용되곤 한다.

폭력과 공포 정치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며 고문과 대량 수배와 대량 구속을 낳는다. 이러한 政治的 不自由와 暴戾이 있는 한 이에 대항하여 良心의 抵抗은 일어나게 마련이며 이로 인해 대량의 양심수가 생겨나게 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人權과 自由와 人間의 尊嚴性을 위해 쉬지 않고 몸부림쳐 온 것은 대학이었다. 학문과 진리 탐구를 본연의 임무로 삼는 대학이지만, 역사와 민족의 어둠 앞에서는 무엇이 正義이고 무엇이 眞實인지를 말하고 행동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로 대학인은 자각해 왔다. 특히 이같은 역사의 전환기에서 진실과 정의의 편으로 나서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아직 수호해야 할 기득권을 갖지 않은 순수한 학생들이었다. 이것이 역사 발전에서 우리 사회가 특히 학생 운동에 덧입은 부채이기도 하다.

그들은 무지한 다수와 기득권에 집착된 집단으로부터 질서와 안정의 파괴자로 지탄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제도 언론을 통해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고, 미래의 발전을 바라보며 오히려 오늘의 외로움을 참고 견디어 온 계층이다. 박종철·이한열·이철규군 등 수 많은 시국 공안 통치의 희생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리하여 대학생들이었다. 대다수의 지식인과 신앙인조차 침묵과 묵시적인 방조의 자리에 있던 유신 독재 치하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시대 정신의 부름에 나서 가장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당한 계층도 학생이었다. '80년대를 지나면서 특히 5공의 부도덕한 정치적 암흑기에도 역사의 밝은 빛을 비추는 선봉장이 되어 자유와 정의와 진리의 편에서 싸워 온 계층은 학생이다. 때로는 과격했고 때로는 과열로 타올라 악법하에서는 그들이 법과 질서의 파괴자로 낙인찍혔으며, 용공·좌경화한 급진 세력으로 또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적으로 매도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일그러진 것이었다. 그들은 사심없이 순수한 동기에서 행동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의 주장이 옳음이 나타났다. 반대로 그들을 매도하던 기존의 정치 체제나 경제 운영의 주체들 또는 제도 언론들은 자신의 고정 관념과 기득권에 얽매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주장의 虛構性이 드러나곤 했던 것이다.

따라서 政治的 狀況으로 인한 理念的 葛藤, 이를테면 민중, 민족, 통일, 민주와 같은 이슈 혹은 단순히 진보냐 보수냐 하는 생각과 행동의 갈등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이 각자 참다운 자유와正義를 누리고 실현하는 데 이르기까지 성숙한 소리를 발할 수 있거나, 그러한 목소리가 수렴될 수 있는 民主的 通路가 확립될 때까지 대학 사회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폭력과 반대 폭력의 악순환이 대학 사회의 공기를

짓누르는 한 위기에 처한 대학이라는 의식의 먹구름은 걷히지 않을 것이다.

3. 어떻게 克服할 것인가?

대학이 이념적 갈등의 전원지처럼 인식되어 온 것은 우리나라에서 대학 사회에 기대하는 社會啓蒙的 役割과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 온 우리나라 大學의 歷史的 傳統 때문이다. 희생되면서도 끈기있게 돌아나는 생명력을 지닌 것이 대학 사회의 학생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역사의 왜곡된 진실을 들추어 내며,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해석하려고 하며, 역사의 인간화 발전에 가로놓인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려는 의지로 돌진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 그들이 의치는 통일의 염원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온갖 정제된 것을 훌으며 역사의 강물에 앞서 흘러가는 주역이 되기를 그들은 자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회 발전과 역사 발전에서 인식과 행동의 다양한 모양새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는 일제 말기와 해방 후 자유당 독재와 5·16 이후 27년간에 걸치는 군사 독재 기간 동안 양심적 지식인과 신앙인, 노동자들도 학생들과 뜻을 같이하며 짐을 나누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조직화되지 못했고 그들을 뒤따를 후계 세대를 계속하여 낳지 못한 데서 한계에 부딪치곤 했다. 그러므로 역대의 정권들은 대학 사회를 지배할 수 있을 때, 나라 전체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교련을 위시한 大學의 兵營化를 위한 다양한 조치, 이데올로기 주입을 위한 국민 윤리 과목의 필수화, 학원 사찰과 대학의 인사 및 재정에 관한 간섭 등은 바로 정권이 대학의 자유와 자율보다는 대학을 타율적인 지배하의 한 단위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외에 다름아니었다. 그밖에도 학사 정계의 배후 조정과 교수 책임용 제도를 통한 교수 활동의 통제 등 전근대적인 전체국가적 발상이 대학의 역사적 현실을 얼룩지우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기회있을 때마다 학원안정법이니 청원경찰제 도입 등

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1965년 9월 우리나라 대학 역사상 최초로 匪이 학원에 난입하기 시작한 이래 대학 사회만큼 경찰력과 군의 발걸에 심히 뒤쳐진 곳도 없을 것이다. 휴업령과 폐교령과 총·학장 취임 승인 취소 등 갖가지 위협 수단이 대학을 짓누르는 한 대학 사회에서 이념적 갈등은 해소되기는 커녕 심화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곳에 어떤 가치적인 Konsens가 형성될리 만무하다. 강제와 타율의 힘이 사실상 지배하는 한 침묵과 굴종이 따를 뿐이다. 그러나 공권력에 대한 그와 같은 굴종 현상은 대학 사회를 내부적으로 분열시키고 결국 교수와 학생, 학생과 교직원들을 불화와 불신의 늪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참다운 교육과 학문 연구가 꽃필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같은 갈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 당국이나 문교 정책이 대학의 자유와 자율을 얽어 매려는 惰性化된 意識에서 벗어나야 하리라고 본다. 大學의 御用化는 어용 학문과 어용 예술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대학의 존재 가치 자체를 의심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학문 연구와 교수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그 발전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 임무를 안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직접 통제하고 개입하려고 해서 안 될 것이다. 대학 사회도 자체내에 건강한 규범과 전통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여러 대학들과 더불어 인류 공동의 정신적·문화적 유산들을 공유하고 있는 생명력 있는 단체이다. 따라서 政權은 有限해도 大學은 長久하다. 유한한 운명을 안고 있는 정권이 대학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대학의 자존과 자부심에 바탕을 둔 정상적인 규범에 의해 스스로 학문 내적인 자기 성찰·자기 비판과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學問內의 自體統制力에 맡기고 단지 이같은 학문 내적인 자기 통제 과정을 지켜 보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적 법치 국가의 행동 규칙에 합치되는 보충성과 비례성의 원칙에도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大學의 自由는 大學의 自治를 그 본질로 한다. 그것은 대학의 자율과 자치가 가능할 때 학문 연구와 학술 활동의 자유가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대학의 자치의 영역은 대학 인사, 대학 학사, 대학 재정, 대학 규율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다. 그러므로 대학 행정 담당자들은 자체내의 道德的 自淨力을 높여 대학 운영에 간섭하려는 공권력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대학생도 교수와 함께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의 주체이다. 그들은 초·중·고교생들처럼 학문의 자유의 결실만을 향유하는 수동적·학문외적 집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대학의 인사·학사·재정·규율 등의 사항에 관해 參與와 發言을 할 수 있는 機會는 충분히 주어지야 한다. 그들의 참여권의 정도 문제가 또하나의 이념적 갈등이 되고 있지만, 대학 자치의 본질상 그들의 참여 폭은 교수 집단이 지금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준에까지는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하나의 해결 방안으로는 改革의 중요성에 대한 共感帶의 확산이다. 이것은 비단 대학 사회 내부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구조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의 변혁을 위해 혁명적 수단을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수단을 고려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다.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미 세계시민적 목소리가 된 지 오래이다. 인간은 각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기 권리를 찾아 누려야 한다는 명제는 너무도 자명하다. 배고픔과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체제에 순응토록 강제하는 강요된 힘으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한다. 익명의 권력에 의한 조종과 타율적인 지배와 억압으로부터도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 E. Bloch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각자 노예 상태와 빈곤 상태에서 해방되어 바로 서서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인간의 '바로 서서 걸음(aufrechter Gang)'에 이르는 방도는 여타 가지일 수 있다. 혁명과 개혁과 계획과 개발과 교육에 관한 정책 등이다. 이러한 방도의 배후에서 그 방법을 선택하게 해주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人間性이라는 價値이다. 인간성 있는,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는 급진적인 혁명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이 현명하다. 산적한 불의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악의 잔재를 소탕해 버리는 혁명의 수단보다 더 실효성 있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혁명의 와중에서 희생되는 인간과 인간성을 고려할 때 혁명은 문제 해결의 최선의 수단일 수 없다. 베자 팔레비의 부도덕한 정권을 몰아낸 이란의 이슬람 혁명 정부는 정권을 인수한 지 1년 안에 10여 년에 걸친 팔레비의 공포정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혁명의 이름으로 고문하고 처형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혁명 이후에 뒤따르는 이성과 법적 안정의 진공 상태가 혁명 이전의 혼란과 부정의를 능가하는 폭력과 공포적 위력을 초래해 인간의 삶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나라의 역사에서 체험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혁명보다는 개혁의 길이 사회와 역사의 발전을 위해 선호되어야 할 수단이다. 우리는 혁명적 정열이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회복하기 힘든 오류를 점진적인 개혁의 길목에서 열린 마음의 공감대를 통해 피하고, 우리가 바라는 민주와 인간다운 세계를 건설해 나갈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폭력보다는 사랑의 힘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야 하리라고 본다. 폭력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이다. 구조적 폭력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물리적 폭력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상황의 윤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에 바탕을 둔 본질적인 윤리의 구체적인 실현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대학 사회의 문제나 경제·사회적, 정치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의 힘이라는 점이다. 폭력은 일시적인 성과를 약속해 주는 듯하지만 모든 입에 쓴 열매만 남긴다.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서 관용과 인내를 포괄하는 사랑의 정신만이 평화라고 하는 건강한 열매를 낳는다. 폭력이나 사랑이나, 혁명이나 개혁이나, 전쟁이나 평화나 하는 문제에 대한 선택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그 선택을 이끄는 가치의 기준은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人間의 人間性에 더 奉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적과 친구의

양분론과 증오와 공격성을 부추기는 이데올로기적 선동은 그것이 극우이건 극좌이건 인간의 인간성에 대한 위협 때문에 절제되어야 한다. 나라의 교육 정책도 증오의 재생산을 위한 교육에서 사랑과 평화와 인간성을 위한 교육으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

4. 맺음말

대학이 이제는 그 이념적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 제 궤도로 진입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진리 탐구와 학문 연구 기관인 대학 스스로 그와 같은 뒤엉킨 이념 갈등 속을 파고 들어가 부정적 이념 형식인 虛偽意識을 들추어 내 그 실체를 규명하고 肯定的 理念의 형태들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進取的이고 積極的인 作業을 벌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인은 대학의 문제를 대학 스스로 풀어 나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고, 대학의 문제와 얽혀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理念批判的 視點을 견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학은 물론 사회에서 뽑어대는 公需를 함께 승수어야 할 운명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대학은 사회와 구별되어 스스로의 自淨力을 키워 사회에 다시 신선한 역풍을 불어 보내야 할 문화 유산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당장 정치를 연출하거나 國富를 산출해 낼 힘은 없지만, 자유와 인간성에의 신봉을 교육의 현장에서 추구함으로써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대립 속에서도 우리의 민족 공동체와 인류 공동체가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공유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들을 간직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자면 학생들도 명예와 인격의 품위 유지를 위한 높은 도덕성에 자신의 질풍노도적 감정을 쳐 북돋우는 자기 성찰과 절제의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교수들도 높은 이상과 암울한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랑과 정신적 화해의 새로운 몸가짐을 지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 가슴으로 자기 갱신의 아픔을 감내하는 지성만이 위기에 직면한 오늘의 대학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